

빅데이터 활용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전북교육청,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 시행... 사고 위험 시기·유형 사전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활용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축적된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는 월별·학교급별·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와

유형을 학교 현장에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교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 안전교육과 생활지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예측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학교

급별 평균 사고율은 직전 분기보다 유치원 4.2% 초등학교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의 체합합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사전 안전교육과 활동 중 생활지도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를 통해 △분기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학교 현장 중점 관리사항 △학생 대상 안전교육 자료 등을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배포해 학교가 이를 안전교육과 체험활동 안전관리, 생활지도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경단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를 통해 학교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안전정책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6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026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도·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원, 도내의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남원용성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실천을 나누고 성장의 길을 함께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기초강연과 현장 사례 발표, 분임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기초강연은 최혜정 교수가 맡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북의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용봉초등학교의 김현주 교장이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 교장은 학교 내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경험과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분임활동은 △초등 단계와 성장하는 학생 지원 △중등 변화하는 학교 안 학생 지원의 실제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와 지역사회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오상근 기자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에 '남원용성고'

A파트 분야 지역인재 양성 본격화... 전북 직업계고 3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남원용성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을 운영해 교육과 취업, 지역 정주율을 연계하는 인재 양성 모델이다.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 소수 학교만 선정되는 사업으로, 전북은 2024년 한국지프과학고등학교, 2025년 수소에너지고등학교에 이어 올해 남원용성고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용성고는 지역 스마트농업 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팜 분야를 특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농업·공업계열 4개 학과를 A파트, A파트테크, A파트페라 등 3개 학과로 전면 개편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 남원시청을 비롯해 IG화학 판한농, 아름 티에스팜 등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취업지원, 지역 정주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용성고는 앞으로 5년간 교육부로부터 최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A파트 첨단 실습환경 구축과 산학협력 기반 취업·창업 교육 강화, 청년 정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한동 남원용성고 교장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지역 기업 발굴과 학과 개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함께 힘을 모은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남원용성고가 A파트 분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거점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용성고는 앞으로 5년간 교육부로부터 최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A파트 첨단 실습환경 구축과 산학협력 기반 취업·창업 교육 강화, 청년 정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한동 남원용성고 교장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지역 기업 발굴과 학과 개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함께 힘을 모은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남원용성고가 A파트 분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거점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페스티벌 8월 개최

전주대학교가 오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제4회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2026 전주세계태권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국내외 태권도 선수단과 수련생들이 함께하는 축제형 행사로 기획됐다. 호남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국 승인대회로, 올해는 국제대회와 연계해 참가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겨루기 종목이 대한태권도협회(KTA) 승인대회로 처음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주대 총장기 대회는 겨루기·품새·격파 전 종목이 승인대회 체계를 갖추게 됐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포인트 부여와 국가대표 선발권, 전국 대학 입시 시 실적이 주어지는 등 대회 권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회 일정은 △8월 10~11일 겨루기 △8월 12~15일 품새 △8월 16일 전주국제태권도대회(해외 선수단 참여) △8월 17~19일 격파 순으로 진행된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은 8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스페인 갓 탈렌트(BGT) 3위를 차지한 '싸울아비' 태권도 시범단의 특별 공연이 식후 행사로 마련됐다.

한편 참가 신청은 1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학교 구성원 신뢰 잃어가는 임시이사회"

완산학원 소속 교직원들, 성명 내고 특정 단체 출신 인사 편중 등 문제 제기

완산학원 소속 교직원 38명이 임시이사회의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교직원들은 9일 공개한 성명에서 "현재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비리사학 정상화라는 본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운영 방식 개선과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직원 38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임시이사회 운영 과정 중 특정 단체 출신 인사 편중, 교육용 공간의 법인사무실 사용, 비위 전격자 중용, 교직원 의견수렴 없는 정관 개정 추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직원들은 현 임시이사회와 감사디수가 특정 교육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동일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인사 중심의 운영은 견제와 균형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약 56평이 현재까지 법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이 2019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직원들은 과거 공공형으로 중징계를 받은 행정직원이 법인국장 직무대리와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됐다고 주장하며 "비리와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 정수 축소와 교직원 인사위원회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특정 집단 중심 운영 중단 △교육용 공간 반

환 △비리사학 정상화 역할 충실 △교직원 의견수렴 없는 정관 개정 중단 △비위 전격자 중용 중단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점검 및 감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공공성,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학원은 2019년 횡령과 채용비리, 교육재산 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내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교직원 측의 주장으로, 향후 임시이사회와 관계 기관의 입장 포명이 주목된다.

/오상근 기자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착 이끈다

전북대 정준호 교수, 전국 최초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전북대학교 정준호 교수(사회대 행정학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향후 3년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고도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전국 2개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행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화기본법, 문화정책법, 문화다양성, 공동체, 창의성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정책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문화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 교수는 2028년까지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비롯해 평가위원단 운영, 정책 담당자 교육, 평가 결과 환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문화정책, 지역문

화, 문화도시, 국가유산,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사후 평가를 넘어 정책 수립 단계에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도구'로서 문화영향평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후평가 확대,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문화도시, 지역문화정책, 문화가버너스, 문화행정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문화영향평가 전문·약식·진단평가에 참여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특히 제도 발전 방향과 추진체계 개선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정준호 교수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전국 최초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서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수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문화영향평가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제도 확산과 정책 적용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오늘까지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북 예선

도내 학생 121명 참여, e스포츠·정보경진 부문 등 기량 겨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6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국대회 예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디지털 기초 소양과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표현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대회 예선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교 학생 등 12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e스포츠 부문은 닌텐도 스위치 배구,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FC 온라인, 폴가이즈,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 덴스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정보경진 부문은 아래한글(ITQ), 동영상 제작, 스마트 검색, 소프트웨어(SW) 코딩,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검색,



색, 디지털 소양 교육 등 8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지역대회도 이달 말까지 도내 특수학교와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어진다. 지역대회는 한컴타자과 카트라이더 종목으로 진행되며 약 4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회와 전국대회 예선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우수 참가자를 선발해 전국 본선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선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소노캠 비발디파크에서 열린다.

/오상근 기자

안전 체험학습·투명한 계약문화 조성 '맞손'

전주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차량업체와 청렴 협약

전주교육지원청은 9일 교육지원청 협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업체 대표들과 '2026년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내 현장체험학습 및 통학차량 운송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는 데 공감하고, 안전한 이동 지원과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전주교육지원청은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차량업체 대표들은 청렴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행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상근 기자